

#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사업성과를 통해 본 정책방안

정 영 금(가톨릭대 교수) · 조 성 은(가족친화지원센터 본부장)  
안 재 희(가족친화지원센터 팀장) · 김 지 수(가족친화지원센터 팀장)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근거로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연구들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가족정책을 구성하기 위한 세부영역 연구인데 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기초로 정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며, 특히 가족친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및 관련사업의 성과와 현실을 알아보기 위해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비교해본 결과, 2차 계획에서 영역의 비중이나 대과제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족친화정책이기 보다는 안전한 환경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1개 대과제 중 하나인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은 가족친화 지역 인프라 구축과 가정폭력 예방 및 가족구성원 인권보호로 구분되어 직접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역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부 범시행상에 나타난 일-가정 양립실태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노동시간이 많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정부의 단시간 근로정책과 배치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2011년 기준 여성근로자 육아휴직자수는 56,137명이었고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1402명이었다. 연도별 증가율로 볼 때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여성 육아휴직자수보다 빨리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육아휴직사용자 약 58,000여명 중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8%이며 남성 육아휴직자 중 공무원의 비율은 85%로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친화문화의 대표적 사업인 가족사랑의 날 시행율은 가족친화인증사업이나 가족친화포럼 등을 실시하면서 높아지고 있지만 전체 기업 대상 실시율은 여전히 낮다.

한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설치 이후 약 2년간의 사업성과를 분석해 보면, 컨설팅실시기관이 약 8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인증사업체 역시 약 200여개에 달하고 있어 양적으로는 많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업체가 수도권에 편중되거나 인증의 정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인력이나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결과를 활용하는 후속작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넓은 범위에서는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정시퇴근을 강제화하거나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방안, 파파쿼터제의 강제화나 다양한 가족관련 휴가제의 활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대표적으로 실행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는 추후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가족친화제도 및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촉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컨설팅사업의 다각화, 기업인증사업의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 유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연계와 협력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